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74
----------	-------

발의연월일 : 2022. 6. 15.

발 의 자 : 하태경 · 김 용 · 신원식
백종헌 · 양정숙 · 이만희
이채익 · 하영제 · 홍문표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점용·사용허가 시 공유수면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입지기준이 없어 그로 인한 경관훼손,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민들의 생계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또한 공유수면관리청이 입지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점용·사용허가 행위가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공유수면관리청에 입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두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

한 지속가능한 공유수면 이용·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후단 및 제8조의2 신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협의하여야 한다”를 “협의 후 제8조의2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공유수면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여건, 해안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경관 및 환경훼손 여부, 어업·선박의 항해·군사목적의 활동 등 기존의 해당 공유수면에서 행해지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물에 대한 입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유수면관리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

유수면관리청이 수립한 입지기준, 주민수용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②(생략)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협 의 후 제8조의2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공유수면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여건, 해안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경관 및 환경훼손 여부, 어업·선박의 항해·군사목적의 활동 등 기존의 해당 공유수면에서 행해지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설치물에 대한 입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 ⑨(현행과 같음) 제8조의2(공유수면관리위원회) 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④ ~ ⑨(생략) <신설>	

· 의결하기 위하여 공유수면관리청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시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수립한 입지기준, 주민수용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